

부동산 개발과 사회 안정을 노리는 중국의 정책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과 스마트시티 산업에의 함의¹

[글] 백우열 교수 wypaik@yonsei.ac.kr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1
이 글은 백우열, 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사회 불안정, 신형도시화(한국 정치학회보 48집 4호, 2014, 27-48)을 한국정치학회의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아 요약,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요약본의 특성상 각주와 참고 문헌을 최소화했으며 이에 관해서는 글의 원문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포함한다. (1) 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의 정치경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관계(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의 이론틀을 통해서 분석하고 (2)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결과가 국가-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의 '후견인-수혜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 clientelism)의 결탁의 이론틀로 분석하며 (3)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민과 도시민의 토지 및 부동산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응한 군체성 사건을 '정당한 저항(rightful resistance)'의 이론틀로 분석하여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改革開放) 정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본격 도입되자 중국 시민들은 점차 '소유권'에 눈뜨기 시작했다.² 그 소유의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즉 집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택, 광범위하게 부동산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도시에서는 단위(單位)가 농촌에서는 생산대(生產隊)가 각각 국가와 집체로서 주택, 건물을 실질 소유했고 구성원에게 사용권을 분배하고 회수했다. 하지만 시장경제 도입 이후로 부동산은 소유의 핵심 대상이 되었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다. 나아가 지난 35년간 평균 10%에 육박하는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해온 중국 경제에도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부동산 개발 성장은 예상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들(negative externalities)을 양산했으며, 중국의 사회 안정(社會穩定)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사회 안정은 지난 64년간 장기집권을 유지해온 중국공산당 권위주의 정권 생존의 핵심 조건이다. 개혁개방 정권의 최대 위기였던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덩샤오핑이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개혁파 자오쯔양을 향

해 “중국은 혼란해서는 안 된다!(中國不能亂!)”라고³ 경고한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 기초한 것이다. 즉 국민당-공산당 내전(1927~1950)을 시작으로, 마오쩌둥의 전체주의 시대에 벌어졌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0)과 문화대혁명(無產階級文化大革命, 1966~1976) 시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과 분열 가운데 통일국가를 지켜낸 덩샤오핑과 혁명 원로들에게는 중국공산당 정권의 생존이야말로 궁극의 정책 목표였다. 이렇듯 ‘사회 안정이 그 무엇보다 우선(穩定壓倒一切)’이라는 정책 기조는 제3세대 장쩌민, 제4세대 후진타오-원자바오, 2012년 이후 집권하고 있는 제5세대 시진핑 중심의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로 확고히 계승되었다.

개혁개방기 사회 불안정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려는 지방 기층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좌농성, 시위, 파업, 폭동 등의 집단 소요, 즉 비제도적인 대중사회 운동(mass social movement)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로 확인된다. 공안국(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군체성 사건(群體性事件), 즉 집단 소요 사건의 발생 횟수는 1994년 8,000건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185,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결합한 불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형성된 기득권층, 즉 당정 간부와 신흥 자본가 집단의 대중에 대한 과도한 이익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이익 침해는 노동·교육·환경 분야를 비롯하여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불법 토지수용, 강제 주택철거, 보상금 미지급 및 이주 문제, 이와 관련된 각종 부패 등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집중, 그에 따른 빈부격차가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회 불안의 간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와 긴밀히 연관된 신경제 정책인 ‘신형도시화’가 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장기적 관건이며,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는는 문제의식 하에 이에 대한 기초적인 정책적 분석을 시도한다.

2 이러한 소유권은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http://www.gov.cn/flfg/2007-03/19/content_554452.htm [검색일: 2013. 8. 30] 참조.

3 ‘鄧公告趙紫陽：中國不能亂’，文匯報，2004. 8. 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의 문제는 모든 것에 앞서 안정을 필요로 한다. 안정이 없는 환경에서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으며 이미 획득한 성과도 유실될 것이다(中國的問題，壓倒一切的是需要穩定。沒有穩定的環境，什麼都搞不成，已經取得的成果也會失掉)”라고 말했다.(薑愛林，2011, 4)

집체상방과 군체성 사건, 그리고 원자바오의 대응책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수십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탄원인들이 상급 정부기관들을 방문하여 호소하는 집체상방(集體上訪)과 이와 결합된 군체성 사건이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토지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불법 행위와 불공정성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개발상의 결탁, 부패, 이익 독점의 부정적 결과가 그 원인이다.

거시적·미시적으로 복합적인 중국의 정치경제적, 국가-사회적 구조와 동학(動學)은 상당히 복잡적이다. 첫째, 부동산 개발 분야에 관하여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경제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재정 분야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정책이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지방정부는 관할권 내의 국유 토지와 농촌 집체 토지의 수용·출양·임대 등을 직접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였고, 이와 연관된 중앙-지방정부의 갈등 관계가 발생했다. 둘째, 그 결과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開發商, 부동산 개발업자, developer)이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위 지방상업연합(local commercial coalition)이 구축되었고, 이로부터 농민과 도시민의 토지와 부동산 권리에 대한 침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또 하나의 갈등적 지방국가-사회 관계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지 및 부동산 권리와 이익 침해에 반발한 농민과 도시민의 대규모 군체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의 결탁 명분을 인정하자,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rightful resistance)’이 늘어나면서 사회 불안정이 가속화되었다.⁴

부동산 개발의 공정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원자바오의 집권기(2003~2012),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공산당 지도부는 부동산 난개발과 거품, 이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불법 토지 매각과 개발상과의 결탁(후견인-수혜자 관계) 및 부패가 중국 경제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부동산 개발이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재정과 중장기 발전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공산당의 해결 과제로 대두되었다.

원자바오와 그의 경제팀은 무조건적 성장 우선 정책의 한계를 인식했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하는 ‘조화사회(和諧社會)’의 사상적 기초를 정책 바탕으로 삼았다. 2010년 4월 원자바오의 경제팀은 ‘부동산정책국가10조(房產政策國十條)’와 같은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중국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로 규정했다. 이러한 강력한 대중 보호 정책(토지수용 및 주택철거 시 지방정부의 공권력 남용 방지, 도시민과 농민의 법적, 정치적 권리 홍보, 보장성 주택의 적극적 건설, 지방정부의 무계획적 토지 수용 및 출양에 대한 경고 및 제재, 투기 세력 억제 등)은 부동산 개발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사회 불안 현상을 어느 정도 둔화시켰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4 이 정치경제와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는 매우 복잡적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이 요약본의 원본과 백우열, 정치적 자원 결여에 따른 경제적 약자의 대응: 중국 농민공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9집2호, 2015, 83-110 등을 참조.

신형도시화, 시진핑 정권이 제시한 안정화 정책

2012년 11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신지도부의 등장을 공식화한 18차 공산당대회(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부동산 개발의 사회 불안 요소와 관련된 강력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0년대 후반, 특히 2010년 이후 제4세대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 그리고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계와 경기 후퇴 등으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조정된 데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신지도부는 ‘중국 특색의 신형도시화(新型城鎮化)’라는 포괄적인 토지, 부동산, 도시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2013년 11월 개최된 18차 당대회 3중전회의 결정문인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2013年11月12日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通過))’의 여섯 번째 항목(“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 기제를 완비한다”)에서 구체화하고 있다.⁵

이 ‘신형도시화’ 정책 기조는 2012년 12월에 실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 정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화 추진, 도시화의 질 제고에 주력’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한 것으로, 시진핑-리커창 지도부 체제 10년간(2012~2021)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다시 부각되었다. 앞서 발표한 제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發展規劃, 2011~2015)에서 중국은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전환하여 수출과 투자와 더불어 ‘소비’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으며, 이후 제5세대 지도부가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신형도시화’이다. 물론 이 도시화는 내수 소비 확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인 산업화, 정보화, 농업 현대화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채택된, 앞서 말한 18대 중공중앙 결정문에서 구체화된 신형도시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체제와 기제를 정비하여 중국 특색의 신형도시화를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추진하고 대, 중, 소 도시와 진(鎮, 한국의 군과 유사한 행정단위)의 조화로운 발전과 산업과 도시, 도시화와 신농촌 건설의 발전을 융합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사항으로 (1) 도시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의 확장과 사회자본의 도시 인프라 운영 참여 허용, ‘현 ‘의 ‘시’로의 변경 등 도시 행정 구역의 체계적 변화, 발달된 큰 규모의 진 중심 도

5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 임기 5년의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 중 대표대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 중앙위원회장은 총서기이며, 전체회의는 매년 한두차례 소집되고, 대부분 전국대표회의의 직전이나 직후에 열리며, 이 회의에서는 정치국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고,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 주석과 군사력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추천한다.(중국시사문화사전)

시화 추진 (2)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의 시민화를 통한 도시주민화, 이를 위한 진과 소도시의 호적취득 규제 전면 해제 및 중대도시 호적제도 완화 등의 호적제도의 개혁, 거대도시 인구 증가의 억제 (3)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향상 및 도시 이주민들의 도시주택과 사회보장 체계에의 진입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이고 방향 제시적인 정책을 ‘부동산 개발과 사회 불안정’ 문제와 연계하여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토지부동산 개발과 연관된 농촌 이주민의 도시 공공서비스, 도시 사회보장 체계로부터의 소외, 불균형한 진과 소-중-대-거대도시 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은 균형적이고도 평등적인 부동산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일한 결정문의 ‘현대시장체계의 신속한 보완’에서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건설용지 시장 구축에 관해 농촌 집체토지와 국유토지의 시장 권리와 가격 적용, 토지수용 범위의 축소와 토지수용 절차의 규범화를 통해 해당 농민들에 대한 합리적, 규범적, 다원적 보장기제 정비 등의 강력한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개발의 약탈성과 불평등 정도를 낮추어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하다.

다시금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신형도시화 정책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신형도시화는 지난 4세대 지도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대상은 물론 지방상업연합의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이다. 또한 공격적인 도시화 추진은 추가적인 부동산 개발 촉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는 지속적인 토지 매각 임대를 통한 재정 확보 및 지방경제 성장률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고, 개발상에게는 지방정부와의 상호 공조와 결탁을 통한 막대한 개발이익 획득의 여건을 조성한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 즉 개발상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보장성 주택의 대규모 건설을 통한 상품방(商品房)⁶ 건설의 비용 조절,⁷ 상급 정부와 개발상을 배제한 농촌 집체의 토지 직접개발의 부분적 허용, 농지 수용 배상기준의 상한선 철폐 등의 보완책이 함께 추진된다. 또한 시진핑 정권 1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부패 방지(反腐敗)’도 공격적으로 지속된다.

⁶ 상품방(商品房, commercial housing): 분양주택, 오피스,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하는 상품주택의 상위개념

⁷ 하지만 시진핑 정부 들어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영/민영 개발상과 지방 정부에서 이윤이 극히 제한적인 보장성 주택 건설에 난색을 표했고, 보장성 주택 자체에 상당히 많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두어 도시 중저소득층이 구입과 임대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향후 정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폭리 산업’의 위치가 공고한 부동산 개발과 토지 매각 및 임대 는 지방정부에게 포기할 수 없는 수입원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을 매개로 하는 지방상업연합의 이익 독점 구조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높은 수준의 자율 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로부터의 통제 부족, 경쟁 선거 부재로 인한 아래로부터 의 통제가 되지 않는 권위주의 정권의 속성상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어렵다.

결국 재점화된 부동산 개발은 신형도시화의 긍정적 의도와는 달리, 지난 20년 넘게 지속된 불법적 폭력적인 농촌 집체 토지수용 및 출양, 도시의 주택 철거 및 재개발, 이에 따른 불공정한 이주 보상 문제, 대규모의 부패 문제를 완화시키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의 부정적 결과들이 지속 확대된다면 이에 저항하 는 농민과 도시민들의 정치적 행동도 더욱 확대될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2017년에 6.5%의 연간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웠던 만큼 부동산 개발 시장을 통한 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소비와 투자 회복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10년 중후반 신형도시화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산업의 공격적 추진과 결 합되면서 국가적 전략산업 정책으로 발전했으며, 지난 2018년 3월 핵심 연례 정 치 행사인 양회(兩會)에서도 ‘경제운영 10대 중점업무’를 발표하면서 녹색 도시, 스마트 도시, 생태원림 도시(生態園林城市), 인문 도시 건설을 제시하여 정책적 지속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10년대 내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의 위기에 처했는가’라는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 위주의 성장 한계에 부딪쳐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노선 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불법적 착취적 부동산 개발의 주체인 후견 인-수혜자 관계의 지방상업연합, 그리고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대중의 ‘정당한 저항’과 균체성 사건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을 통제하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 칠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적인 통제 전략의 한계

현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신형도시화 정책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이전 지도부가 그나마 억제해온 부동산 개발 및 불법적 약탈적 이익 추구의 재등장과

지속적 악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최소한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르는 부동산 개발의 재활성화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감은 중국공산당 정권이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는 일반 시민들의 저항을 역으로 사회 안정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반직관적인 통치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참조> 다른 권위주의 정권의 경우, 대개는 아래로부터의 집단적인 저항이 발생했을 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봉쇄하거나 물리적으로 탄압한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정권은 상당한 규모의 집단 저항 행위들을 지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약자인 농민, 도시민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지렛대를 부여하고 있다. 즉 그들의 저항을 무소불위의 지방 당정간부들에 대한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신형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 시장이 참여한 이해 갈등의 장이 된다면, 과연 이러한 반직관적 권위주의 전략으로 사회 불안정 문제가 통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통제 전략은 한계를 지닌다. 이는 비공식적인 정치 협상의 기제로서, 공식적이고 시스템화된 선거 등에 비해 정치적 이해관계 조절과 타협을 유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중의 집단적 저항이 현상 유지 또는 축소되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안정한 협상-타협 정치 메커니즘으로는 증가하는 집단 저항을 막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

더구나 시진핑의 제5세대 지도부 통치가 본격화된 현재, 시민과 사회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집단적 저항에 나선 근대화된 시민들은 교육 수준과 정

그림1 국가-사회 관계구조



자료 백우열, '정치적 자원 결여에 따른 경제적 약자의 대응: 중국 농민공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9집2호 2015. 91.

* 이러한 국가-사회 관계구조는 최근 더욱 분화된 계급구조 간의 상호작용 형태로 진화하였다.(관련 분석은 백우열(2015) 참조.)

보 획득 능력이 향상되어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불만은 농민과 도시민 계층을 넘어서 농민공, 대졸학력 고급인력 실업자, 무주택 도시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집단저항의 경험을 통해 ‘더 크고 시끄럽고 폭력적’으로 저항할수록 협상력이 높아지는 대중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상업연합의 후견인과 수혜자들이 야기한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의 유통 경로(social network service) 역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도 신형도시화 정책으로 2015~2025년 사이(약 10년간) 2억 명 정도의 농민이 도시로 추가 유입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는 급증할 것이다. 제도적 대중 참여를 포함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시진핑 정권의 변화 적응력과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대응 전략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사회 불안정의 연관성은 한국이 대중국 경제 및 정치 관점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기반이다. 한국은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정책과 결합된 스마트시티 산업을 핵심적인 차세대 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국가 산업 및 도시정책 수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적 도시계획 수준, 그리고 다양한 산업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발전시키며 중국 및 인도·일본·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한 자원 투자와 지자체 수준의 ‘현실화’를 기반으로 한다.⁸

서울시 또한 중국의 지자체들과의 다각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국가-사회적 변화의 양상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중국의 신형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울시와 중국 지자체가 상호 발전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W**

8

‘스마트시티’ 산업 전반에서 중국 및 일본과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7-26호, 2017. 10. 25. 참조.

참고문헌

- 백우열, 정치적 자원 결여에 따른 경제적 약자의 대응: 중국 농민공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9집2호, 2015. 83-110.
- 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7-26호, 2017.10.25.
- 董愛林(지강아이린), 2011, 習近平經濟社會發展“穩定觀”研究, 戰略與風險管理, 第6期: 4.